

# 주간 통일정세

2015-12

## Contents

###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남한 대미종속" 비난(3/21, 연합뉴스)
  -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조국통일연구원은 21일 남한이 미국에 철저히 예속된 식민지라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연구원은 21일 백서를 발표하고 한미행정협정(SOFA), 한국의 영어교육 열풍 등을 들어 한국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예속된 미국의 식민지"라면서 박근혜 정권이 출범 후 식민지로 더 깊숙이 전락했다고 주장함.
  - 연구원은 미국과 남한에 대해 "준엄한 철추를 내려야 하며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되찾고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 애국성전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북한, 대북전단에 '화력타격' 위협...주민대피 권고(3/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2일 발표한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공개통고'에서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비난하며 "모든 타격수단들은 사전경고 없이 무차별적인 기구소멸작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이어 "빠라 살포에 대한 물리적 대응은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라며 "물리적 대응 조치에 '원점타격' 등으로 도전해 나서는 경우 2차, 3차 징벌타격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 북한은 "반공화국 빠라 살포 수단이 풍선이든 무인기이든,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화력타격 수단의 과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영공·영토·영해에 대한 그 어떤 '침범'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함.
  - 또 "우리 군대의 타격 대상은 철두철미 인간쓰레기(탈북자)들과 그들의 빠라살포를 묵인·조장하는 동족대결 광신자들"이라며 대북전단이 살포되면 인근 주민들은 '군사적 타격권에서 벗어나' 미리 대피할 것을 당부함.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남측, '리퍼트 피습' 중북몰이에 악용"(3/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남한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중북몰이'에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날 발표한 '보도'에서 남측이 리퍼트 피습 사건에 대한 배후조사에 착수하는 등 '중북' 소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 거부감과 체제대결 야망의 집중적 발로"라고 주장함.
  - 이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대사 징벌 사건을 계기로 반공화국 도발 책동 도수를 한층 높이는 미국과 박근혜 패당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미국과 반통일대결분자들의 망동을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북한 '한수원 해킹' 부인... "영터리 판단"(3/17,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7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자료 유출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황당한 증거로 가득 찬 모략적인 북해킹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이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린 것을 "무지무능아의 영터리 판단"이라고 비난함.
  - 우리민족끼리는 "한수원 해킹이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과 시기적으로 비슷하다고 해서 북한의 소행으로 매도하는 것은 초보적인 추리 능력"이라며 합동수사단이 '현실분석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해킹 과정에서 한글이 사용된 점, 이번 해킹이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난 과거 농협 사례와 유사하다는 점이 이번 사건 수사 결과의 원인이 됐다면서 이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아니라고 반발함.
  
- 북한, 홍용표 통일장관 원색 비난... "도발이자 우롱"(3/18,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8일 홍용표 통일부장관과 북한과 대화를 강조한 그의 취임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조평통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홍 장관의 취임사에 대해 "우리를 걸고 들며 핵이니, 도발이니, 대화니 뭐니 하는 것 자체가 가소로운 망동이며 참을 수 없는 도발이고 우롱"이라고 밝힘.
  - 대변인은 홍 장관이 통일준비위원회를 '비호두둔'했다면서 이는 "체제통일, 흡수통일 망상을 버리지 않고 더욱 노골적으로 추구해 나가겠다는 불순한 속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함.

- 또 홍 장관을 '박근혜 대통령의 수발이나 들던 철부지 애송이' 라고 폄하하고 "이제 통일부가 청와대의 어용 나팔수, 대변인으로 전략할 것"이라고 비난함.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라. 대남 군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부

#### 바. 남북 사회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韓美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 관련 '핵선제타격을 위한 전형적인 공격연습, 핵시험전쟁' 이라고 지속 주장 및 '백악관과 청와대를 비롯한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혁명강군의 멸적의 조준경 안에 들어 있다' 며 "최후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니다"고 강조(3.15,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 관련 '극악한 반통일대결광신자' 로 평가하며 '험악한 남북관계가 더욱 엄중한 파국상태에 빠져도 무방하다는 괴뢰집권자의 흉악한 심보를 잘 알 수 있게 한다' 고 주장(3.15,중앙방송)
- 최근 대통령과 정부 비판 전단지 살포는 '친미사대와 동족대결로 일관된 현 집권자의 악정에 대한 분노한 민심의 표출' 이라며 '괴뢰패당이 파쇼독재통치와 반공화국 대결소동에 계속 미쳐 날뛰다면 민심의 총폭발로 비참한 종말을 고히게 될 것' 이라고 비난(3.16,중앙통신·노동신문)

- 최근 대통령과 정부 비판 전단지 살포는 '친미사대와 동족대결로 일관된 현 집권자의 악정에 대한 분노한 민심의 표출'이라며 '괴뢰패당이 파쇼독재통치와 반공화국 대결소동에 계속 미쳐 날뛰다면 민심의 총폭발로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될 것' 이라고 비난(3.16, 중앙통신·노동신문)
- '韓美 합동군사연습으로 지금 한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를 최악의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있다' 며 '우리(北)의 영해·영토·영공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도발자들을 가차없이 쓸어버릴 것' 이라고 위협(3.16, 중앙방송)
-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대변인 성명(3.17), 韓美의 '키 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훈련과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대응을 비난하며 "우리(北) 군대의 무쇠포신과 로켓 발사대들이 발사전의 격동상태에 있다"고 위협 및 '反美, 反괴뢰 전민항전 전개' 선동(3.17,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사 보도(3.17)】 韓美 정부에서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을 '한미동맹 강화, 종북 물이의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고 있다' 고 주장하며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 강조(3.17, 중앙통신·중앙방송)
- 정중욱 '통준쫓'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발언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다"며 남한의 '통준쫓' 같은 기구 운영 자체가 "우리(北)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부정, 북남사이에 이룩된 모든 합의들을 통째로 뒤집어엎는 반통일적 범죄행위"라고 대통령 사과와 '통준쫓' 해체 거듭 주장(3.17, 중앙통신·노동신문)
- 최근 대통령 비방 빠라 살포는 "반인민적 악정과 파쇼통치,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책동에 항거하는 남북 민심의 분출"이라고 지속 주장(3.17, 중앙방송)
-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질의 대답(3.18)】 홍용표 통일부 장관 취임사에서의 對北 발언들(핵개발, 군사적·언어적 도발, 대화전제조건, 급변사태, 통일준비위와 긴밀한 협력 등) 관련 '체제통일, 흡수통일 망상을 버리지 않고 더욱 노골적으로 추구해 나가겠다는 불순한 속심을 드러낸 것' 이라며 '입조심 하는 법부터 배워야 할 것'이라 폭언(3.18,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부산 美 문화원 방화사건일(1982.3.18) 즈음 우리 대통령의 '리퍼트' 대사 병문안 등을 거론하며 '외세의 식민지로 더욱 전락되고 남북관계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며 '美문화원 방화 정신을 이어 反美 反정부 투쟁에 총궐기해 나설 것' 을 선동(3.18, 중앙방송)
- '南 당국의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책동은 거래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용납 못할 민족 반역행위' 라며 '南 당국이 미국과의 동맹 강화로 초래될 것은 북남관계의 파괴와 전쟁밖에 없다' 고 주장(3.19, 중앙통신·노동신문)
- 경찰이 대통령 비판 전단지 살포에 대한 '처벌법규와 대응요령' 을 일선경찰에 하달한 것에 대해 '괴뢰경찰이 박OO 패당의 삼살개로 완전히 전략되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고 비난(3.19, 중앙통신·민주조선)
- 정중욱 통준위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발언을 거론하며 '통준위는 철두철미 흡수통일 모략기구이며 흉악한 체제대결망상 실현의 돌격대' 라며 '통준위를 당장 해체해야 한다' 고 지속 주장(3.19, 평양방송)
- 홍용표 통일부 장관 취임사(北)의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음, 핵개발과 군사적·언어적 도발) 등에 대해 "북남관계에 임하는 현 정권의 입장과 태도를 그대로 대변한 체제통일 기도의 발로, 선임자와 다를 바 없는 대결적 본색을 잘 알 수 있다"고 비난(3.20, 중앙통신·노동신문)
-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공개통고(3.21)】 우리 '자유북한운동연합' 이 천안함 사건 5주기를 전후하여 예고한 對北전단 살포에 대해 '사전경고 없는 화력타격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3.22, 중앙통신·중앙방송)

- '독수리합동군사연습 관련 '북침전쟁현황증에 걸린 韓美는 그 누구의 도발위협에 대해 떠들어댈 명분도 자격도 없다' 며 '혁명무력의 모든 타격수단들이 임의의 작전수행공간에서 언제나 지정받은 목표들을 조준하고 발사 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고 위협(3.21, 중앙통신·노동신문)
- 【조국통일연구원 백서(3.21)】 駐韓 美 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남조선 실상과 중미사대매국노들의 추태를 폭로하기 위해 백서를 발표한다' 며 '정치·군사·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에 철저히 예측된 식민지' 라고 비난 및 '반미 반정부 투쟁' 선동(3.21, 중앙통신·중앙방송)

##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주영 북한대사 "핵무기 발사 능력 갖췄다" 주장(3/20, 스카이뉴스)
  - 현학봉 주영 북한대사는 20일(현지시간) 런던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영국 스카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준비돼 있다"며 "한반도에서 교전이 일어난다면 핵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가 말하는 이유"라고 말함.
  - 그는 북한이 지금 핵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이 있다고 말한 것이냐고 확인하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미국이 핵무기 공격 독점권을 지닌 것은 아니다"고 덧붙임.
  -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보복 공격을 할 것"이라며 "재래식 전쟁에는 재래식 전쟁으로, 핵전쟁에는 핵전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함.
  - 선제적 공격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게 정부의 원칙"이라고 답함.

###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사드 배치 움직임 비난...“침예한 대결국면”(3/19,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장문의 논설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움직임이 "러시아와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변두리에 각이한 급의 미사일방위체계를 구축해 유사시 사면팔방으로 미사일 공격을 들이대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남한 정부가 "사드를 끌어들이기 위한 심상치 않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며 "이것은 가뜩이나 긴장한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첨예한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경고함.
  - 더하여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사건에 대한 정부의 반응도 거론하고 정부가 "친미사대, 외세의존에 더욱 광기적으로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함.
- 북한 "제2의 조선전쟁 박두...미국 파멸할 것"(3/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이 땅은 1950년의 조선반도가 아니다' 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최근 미국의 광기가 '북침' 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의의 핵,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 대미 복수심, 주제적 전략전술을 생각하면 승패는 이미 결정됐다"고 역설함.
  - 신문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을 거론하며 "제2의 조선전쟁은 가상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로 박두해오고있다"고 주장함.
  - 이어 "침략의 도화선에 불꽃이 튀기는 순간은 중국적 파멸을 알리는 비참한 운명의 시작점"이라며 "폭탄맛을 모르고 살아온 미국 역사가 늦가을의 가랑잎처럼 흩날리게 될 것"이라고 미국의 종말을 강조함.
- 북한, 사드 논의 맞서 전쟁위협..."침략역사 중지부"(3/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사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배전략과 조선반도' 에서 "조선반도를 전 조선 민족의 멸살을 초래할 전쟁의 불 마당으로 만들려는 미국의 피 비린 전쟁행위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미국의 첫째가는 목표는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고 전 조선반도를 아시아지배전략실현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라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과 대북 경제제재, 키 리졸브 등 한미 합동군사연습 등도 비난함.
  - 신문은 "그 어떤 형태로든 전쟁이 강요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갈 것이며 미국의 침략역사에 영원한 중지부를 찍을 것"이라며 북미의 결전지는 한반도가 아닌 미국본토가 될 것이라고 위협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특이사항 없음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북한 "북러관계 강화 발전...새로운 단계로"(3/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확대발전하는 조러친선관계' 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적인 조러 친선관계는 두 나라 인민의 공통된 지향 속에 더욱 강화발전될 것"이라고 주장함.

**아. 국제기구**

- 유엔 안보리, 이달 말 북한 미사일 결의위반 조사(3/21,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월 초에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전함.
  -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페인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대북제재위를 개최해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사건 조사를 전문가단에 의뢰한다"고 19일 밝혔다.

- 유엔인권이사회서 북한인권 또 막판 쟁점 부상 전망(3/22, 연합뉴스)
  -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지난 19일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제출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유엔 총회 결의안을 환영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함.

## 자. 기타 국가

- 특이사항 없음

- 평양장애자교류단, 2.20~3.2 영국과 프랑스에서 공연 진행(3.15,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정일 생일(2.16)에 즈음하여 축전을 보내온 여러 나라(미얀마·시리아·나이지리아·우간다) 대통령에게 답전(3.17, 중앙방송)
- 北 정부대표단(단장 : 리수용 외무상), 3월 16일 쿠바 아바나에 도착(3.16,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노동당대표단, 3월 12일 멕시코노동당 전국지도자(알베르토 아나야 구티에레스)와 담화(3.16, 중앙통신·중앙방송)
-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3월 1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주북 러시아 대사(알렉산드르 마체고라)와 담화(3.16, 중앙통신)
- 미국이 '한반도 정세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며 이는 "東北亞 지역에서 패권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으로 "미국이 우리(北)를 희생물로 亞-太 지역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망상"이라고 주장(3.17, 중앙통신·노동신문·민주조선)
- 미국이 韓美 '키 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한반도 안정에 기여 등 정당화' 는 "뻔뻔스런 망발"이라며 "북침불장난 소동에 우리(北) 식의 초강경대응" 지속 강조(3.17,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육해운성 대표단(단장: 강종관 육해운상), 3월 17일 몽골 방문 후 귀환(3.17,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정부대표단(단장: 리수용 외무상), 3월 16일 쿠바 내각수상(라울 카스트로 루스)과 담화(김정은 구두친서 전달) 석상에서 '친선적이며 동지적 관계' 언급(3.18,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더 강화하는 데 나설 것' 호소 관련 '핵대국들의 핵무력 강화를 저지시키고 다른 나라들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해서 핵 우세를 차지하려는 것' 이라고 비난하며 '세계를 기만해 타먹은 노벨평화상이나 스스로 내놓아야 할 것' 이라고 주장(3.18, 평양방송)

- 北, '미국의 아태전략에 따라 핵전쟁을 동반한 새 세계대전의 불꽃이 조선반도에서 튕길 우려가 커가고 있다' 며 '21세기 조미대결의 최후결전은 美 본토에서 벌리게 될 것' 이고 '아태 지배전략의 파멸적 운명은 美 본토에서 결정될 것' 이라고 주장(3.19, 중앙통신)
- 미국의 對北 추가제재·'北 붕괴' 언급 및 韓美 합동군사연습 등 거론하며 "제2의 조선전쟁은 가상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로 박두해오고 있다"며 '우리(北)의 강력한 핵과 軍民 정신력, 對美복수심 등 생각할 때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 이라며 "반미대결전 승리" 호언(3.20, 중앙방송·노동신문)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3월 20일 이란 대통령(하산 로하니)에게 '이란 새해' 즈음 '北-이란 친선협조 확대발전 표명' 축전(3.20,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3월 20일 튀니지 대통령(베지 카이드 에셉시)에게 '튀니지 국경절' 59주년 축전(3.20,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3월 21일 라오스 인민혁명당 창건 60돌 즈음 同國 주석에게 축전(3.21, 중앙통신·중앙방송)

### 3. 대내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북한산 마스크라 했더니...하품 한번에 너구리눈"(3/1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7일 '제품의 질 향상에 주력하는 평양화장품 공장'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지난달 4일 평양화장품공장에서 눈 화장품인 마스크라 제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전함.
  - 김정은 黨 제1비서는 기능성 화장품에 비해 색조 화장품의 질이 외국산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그 대표적 사례로 마스크라를 들었으며 "외국의 아이라인, 마스크라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그대로 유지되는데 국내에서 생산된 것은 하품만 하더라도 '너구리눈' 이 된다"며 마치 스스로 여성 소비자가 된 것처럼 제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열거하였음.
- 북한 김정은, 군 어구생산공장 시찰... "품질개선 중요"(3/1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새로 건설된 인민군 어구종합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함.

- 어구종합공장은 물고기잡이와 바다양식에 필요한 각종 어구를 만드는 '종합 생산기지'로,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직접 지시에 의해 건설됐으며 김 제1비서가 생활건물, 차고, 휴식장 등 공장을 둘러보면서 黨의 의도에 맞게 지어진 데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전함.

■ 북한 공군, 비행장타격 훈련…김정은 참관(3/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黨 제1비서가 항공 및 반항공군(공군)의 비행장 타격과 복구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통신은 20일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있는 미제 승냥이들과 졸개무리들을 격멸소탕하기 위한 전투훈련을 힘있게 벌이고있는 속에서 이번 훈련이 진행됐다"며 김 제1비서의 참관 소식을 상세히 전함.
- 이번 훈련은 "적 비행장 타격에 인입되는 비행대 역량 할당, 타격순차와 방법, 전투비행사들의 폭격술과 사격술, 각종 항공무장의 성능, 파괴된 비행장 복구능력을 실전환경 속에서 검열, 확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통신은 소개했으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밝히지 않았음.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특이사항 없음

## 다. 공식 행사

■ 북한, 내달 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3차 회의(3/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를 4월 9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대의원들에게 알린다"고 밝혔다.
-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에 대한 인선작업을 하고 올해 예산안을 심의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올해 들어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주요 인사를 단행하는 등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열기 위한 내부 정비를 하고 있어 이번

회의가 주목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비전향장기수 리인모 띄우기...“불굴의 혁명전사”(3/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비전향 장기수 리인모(2007년 사망)의 북송 22주년을 맞아 그의 '혁명적 신념' 을 부각하며 2면과 5면 대부분의 글에서 리인모의 활동과 과거 송환 과정 등을 돌아보며 그를 '신념과 의지의 전형인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라고 칭송함.
  - 신문은 "리인모의 한 생은 참으로 고귀한 인생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며 "조국과 인민 앞에 땀땀이 나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절해고도에서도 자기의 신념과 혁명적 지조를 지킨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함.

-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기여한"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3.20, 중앙방송)

##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북한, 2017년까지 묘목 2배 증산 계획"(3/16, 조선신보)
  - 북한이 산림복구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묘목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조선신보가 16일 보도함.

- 신문은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강현(45) 채묘양묘국장이 인터뷰에서 내각이 최근 '산림조성 10년전망계획' 을 구체적으로 세울 것을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힘.
- 이어 2022년까지 나무심기 작업을 진행하고 2024년까지는 상대적으로 산림 조성이 부족한 곳을 조사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최근 중앙과 각 도·시·군 단위에 조직된 '산림복구전투지휘부' 를 통해 해당 지역의 산림복구 작업이 진행 될 것이라고 설명함.

## 나. 주요 후속 조치

- 평양에 식품공장 건설 잇달아...식생활 개선 안간힘(3/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평양 낙랑구역에서 '강냉이 가공공장' 건설이 마감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함.
  - 신문은 부지 면적 1만 m<sup>2</sup>를 훌쩍 넘는 이 공장이 "수도 시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종합적인 강냉이 가공품 생산기지"라고 소개함.

## 다. 경제 상황

- 북한, '먹거리 증산' 촉구... "대중의 심장에 불을"(3/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1면 사설에서 노동당 창건 70주년이자 미국 등 적대세력의 정치·경제·군사적 압박이 심해지는 현재 "식량문제, 먹는 문제 해결은 첫째가는 중대사"라고 강조함.
  - 이어 "일꾼들이 자기의 뼈를 깎아서라도 인민 생활문제를 풀겠다는 비상한 사상적 각오를 가지고 당정책 관철을 위하여 머리를 쓰며 앞채를 메고 달려야 대중이 따라서고 기적과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며 간부들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함.
  - 신문은 지난해 '백 년만의 기쁨' 에도 큰 성과를 낸 연안군 읍협동농장, 영양단지 모관 시범사업을 펼친 배천군 등 성공적 사례들을 자세히 소개하며 간부들에게 "폐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하라고 주문함.

- 미국, '북한 금융거래 주의보' 또 발령(3/18,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정부가 자국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북한 관련 금융거래 주의보를 또다시 발령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함.
  -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 16일 '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차단과 관련한 주의보'를 발표하고 북한의 불법행위에 미국 금융기관들이 관여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함.

## 라. 대외 경제관계

- 중국 훈춘-북한 나선 정기버스 5개월 만에 운행 재개(3/16, 연변신문망)
  - 두만강 유역의 북·중 교역 거점인 중국 훈춘(琿春)시와 북한 나선특별시를 연결하는 정기노선버스 운행이 5개월 만에 재개됐다고 현지 매체인 연변신문망(延邊新聞網)이 16일 보도함.
  - 신문은 이어 편도 2시간이 걸리는 훈춘-나선 노선을 매일 한 차례 왕복 운행하는 이 버스가 2012년부터 운행했으나 지난해 10월 북한이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이유로 방북 외국인에 대해 3주간의 격리·관찰 조치를 단행하면서 운행이 중단됐으며 북한 측이 이달 3일 외국인에 대한 격리·관찰 해제 사실을 공식 통보함에 따라 운행이 재개됐다고 전함.
- 유엔 긴급기금 대북지원, 영양·보건에 집중(3/17, 미국의소리)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이 올해 상반기에 북한에 지원하는 200만 달러를 대부분 영양·보건사업에 쓸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전함.
  - CERF가 최근 공개한 대북 지원자금 분배 내용을 보면 북한의 저소득층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에게 영양강화 식품을 전달하는 세계식량기구(WFP)에 가장 많은 금액인 80만 달러가 지원됐으며 유니세프(UNICEF)는 식수와 보건 사업을 위해 52만 달러, 세계보건기구(WHO)는 영양 및 보건 사업에 38만 달러를 각각 지원받았음.
  - 이 밖에도 식량농업기구(FAO)에 30만 달러가 배정됐는데, 이는 북한 내 콩 생산량을 늘리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힘.

- 북한, 지난해 러시아 수출 32% 급증(3/18,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8일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이 세계무역정보 서비스 업체인 '월드 트레이드 아틀라스'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對) 러시아 수출액은 1천17만 달러(약 114억6천만 원)로, 전년보다 31.9% 증가했다고 전함.
  - 북한의 대 러시아 자동차 수출액도 25만 달러로, 전년보다 2.3배 증가했으며 광학기기의 수출액은 19만 달러로, 전년보다 60배 이상 급증했으며 코트라는 "북한의 대 러시아 수출품 중에는 과거 수출 규모가 거의 없다가 작년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난 경우가 많다"고 분석함.
  
- 북한-몽골, 나진항 통한 광산물 수출 협력(3/18, 인포몽골리아)
  - 18일 몽골 매체 '인포몽골리아'에 따르면 투무르후 몽골 도로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몽골을 방문한 강종관 북한 육해운상을 만나 몽골의 광산물을 철도와 도로, 선박을 통해 제3국에 수출하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투무르후 장관은 "육지로 둘러싸인 몽골에 해양 접근성 확보는 최우선 목표"라며 "이런 관점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 등 3국과 평등과 호혜 협력의 원칙을 지킬 것"이며, "협력의 첫 단계로 항구 공동 활용 사업을 함께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함.
  - 매체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장관이 지난달 러시아를 방문해 운송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향후 중국을 찾아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7월 몽골과 러시아, 중국의 운송 부문 관계자들이 만나 몽골의 광산물을 북한 나진경제특구의 나진항을 통해 수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북한, 5월 금강산서 관광개발 국제세미나 개최(3/21, 요녕신문)
  - 북한 대외경제성 산하 원산지구개발총회사 오웅길 총사장은 20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서 열린 '원산-금강산 개발계획 설명회'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고 현지 매체인 요녕신문(遼寧新聞)이 21일 보도함.
  - 오 총사장은 "오는 5월 금강산에서 원산-금강산 개발 국제세미나를 열어 직접 금강산을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으며 투자자들을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함.
  - 북한 측은 20일 설명회에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가 3시간 비행거리 이내

- 에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가 40여 개에 달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부상할 수 있는 풍부한 관광자원과 잠재력을 집중적으로 홍보함.
- 먼저 추진할 사업으로는 이 프로젝트의 거점도시인 원산과 각 관광지를 잇는 기존 도로망 보수·확장공사, 평양-원산 고속철도 신설, 원산항-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여객항로 신설, 관광객 무비자 제도 연구 등을 소개했으며, 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우대조치로 업종에 따른 1~4년간의 기업소득세 면제와 기반 시설 투자자에 대한 10년간의 토지사용세 면제 등을 제시함.

■ 북한, 인도네시아서 원자재 수입 의사 피력(3/2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인도네시아로부터 신발, 옷감, 고무 등 소비재와 원자재를 수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인도네시아 일간지 자카르타 포스트를 인용해 21일 전함.
-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평양시 위원회의 간부와 경제인으로 구성된 북한 경제사절단은 지난 17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아마드 헤르야완 서자바 주 주지사와 양국 교역확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뜻을 전달함.

- 北, 신발공업부에서 새 제품개발을 위한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여 신발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의 혁신적 성과 이룩 선전(3.15, 평양방송)
-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킬 데 대한 노동당의 사상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이라며 '농산·축산·수산부문의 모든 일꾼들은 당이 제시한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고 강조(3.16, 중앙통신·노동신문)
- 원산구두공장(경영활동 정보화·생산공정 현대화 등)과 유원신발공장(레이저 재단기 등 도입) 등, "신발공업부문의 과학기술에 의거한 생산과 경영활동을 해나가기 위한 사업" 추진(3.17, 중앙통신)
- '산림복구전투는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보람찬 애국사업'이라며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고 강조(3.19, 중앙통신·노동신문)
- 전국산림부문 과학기술발표회, 3월 18일과 19일에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3.19, 중앙통신)

##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북한, 노동정량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3/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근 노동정량법·도로교통법을 일부 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함.
  - 수정된 조항은 노동정량법 14~19·21~24·32조, 도로교통법 61·65·82·87조로 각각 노동량 지정 절차와 관련 행정처벌, 철도 횡단 안전과 운전자 자격 정지 조건 등에 관한 것이며 중앙통신은 "부문 법들의 수정·보충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해당 부문들의 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해나가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나. 시장 관련

- 북한서도 '웰빙 피자' 인기... "썩갓·김치피자 호평"(3/21, 통일신보)
  - 북한 평양 광복거리의 이탈리아 요리 전문식당에서 7년째 피자와 스파게티를 파는 리봉녀 봉사부원은 21일 통일신보와의 인터뷰에서 "피자와 스파게티는 여성의 피부를 맑고 부드럽게 해주고 3대 영양소가 조화롭게 들어 있는 음식입니다."라고 소개함.
  - 이어 "전통적인 피자와 함께 썩갓피자, 김치피자 등 우리 인민의 구미에 맞게 느끼하지 않고 담백한 맛의 피자들도 개발해 손님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말함.
  - 2008년 개업 당시만 해도 이탈리아 현지에서 요리 연수를 받고 온 요리사들이 직접 만드는 피자와 스파게티는 평양 시민 중에서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고급 요리'에 속했으나, 7년이 지난 지금 이들 음식은 북한에서 길거리 음식으로 맛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요리법도 등장하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함.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북한군 탈영병, 중국 단둥서 붙잡혀”(3/20, 연합뉴스)
  - 20일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 17일 새벽 북한군 무장 탈영병 1명이 황금평에서 중국 단둥으로 탈북해 도주했다가 19일 황금평과 가까운 단둥시 안민(安民)진에서 검거되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중국 공안이 주민 신고를 당부하며 단둥 일대에 배포한 수배전단에는 북한 탈영병 1명이 17일 새벽 황금평 지역을 통해 불법 월경했으며 신장 164cm, 1996년생인 해당 병사가 군용칼 2자루와 야시경 등을 소지한 적으로 적함.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 마. 사회 동향

- 북한, 장애인 유럽공연 선전…“인권소동 물거품”(3/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장애 청소년 공연단의 최근 유럽 공연 소식을 전하며 "출연자들이 고마운 사회주의 조국의 장애자 보호정책 속에 예술적 재능을 꽃피우는 모습을 펼쳐보였다"고 주장함.
  - 이어 "이번 공연은 적대 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 소동을 순식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놓은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관객이 북한의 높은 장애인 교육 수준을 알게 됐다고 강조함.
- 북한, 철새 서식환경 개선…“보호지역 개발금지”(3/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철새의 이동 경로인 동서해연안 간석지와 강하구, 습지, 섬지역에 철새 서식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중이라며 "서식 환경 파괴를 막고자 보호 지역에서의 개발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보도함.

- 북한, 인류무형유산 등재사업 활발...“애국사업”(3/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각종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을 인용해 보도함.
  - 로철수 민족유산보호지도국 부국장은 이날 "구전문학, 사회적관습, 수공예술, 민족요리법을 비롯한 비물질유산(무형유산)을 국가적 및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사업을 밀고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더하여 그는 "등록 사업은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정신문화유산을 빛내는 애국사업"이라며 문화사적 가치가 있는 비물질유산의 심의등록 및 평가 사업이 강화되면서 올해 평양지역 무형유산 수십 건의 심의가 제기됐다고 소개함.

-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3월 하순 평양에서 진행 예정(3.17, 중앙통신)
- 평양시 동대원구역 등 전국 각지 소학교들에서 "속산(速算)교육이 널리 도입되고 있다"고 보도(3.17, 중앙통신)
- 北, 지난 몇 해 사이에 수많은 체육시설들이 건설 및 개건되었다고 선전(3.18, 중앙통신)
- 제11차 전국농업근로자 농구경기(22개팀, 남·녀선수), 3월 16~20일 평양(청춘거리·평양 학생소년궁전 체육관)에서 진행(3.20, 중앙통신)

© 북한연구센터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미국서 '북한 핵무기 소형화능력 보유' 주장 잇따라 (03/20, 연합뉴스)
  - 세실 헤이니 미군 전략사령부 사령관은 19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그들(북한)이 이미 (핵)능력의 일부는 소형화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 앞서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연구원과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도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북한이 노동미사일에 충분히 장착할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했다고 믿는다"는 의견을 냈었음.
  - 이에 많은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능력을 갖게 된다면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시도와 맞물려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나. 미·북 관계

- 미 하원 상임위원장, "북한 인터넷 먹통은 소니 해킹 보복" (03/18, 연합뉴스)
  - 17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마이클 매콜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행사에서 사이버안보 관련 입법 현안을 토론하면서 지난해 12월 북한 인터넷망이 수차례 다운된 것은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에 대한 미국의 보복이라고 밝힘.
  - 앞서 소니 해킹 사건 발생 직후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북한 소행이라고 발표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비례적' (proportional) 대응을 천명했으나 북한 인터넷 불통 사태가 소니 해킹에 따른 미국의 보복 조치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혔음.
  - 한편, 매콜 위원장은 이날 미국 기업들이 정부가 해커에 대해 더 강력한 보복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를 위한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을 이번 주 공개하겠다고 밝힘.

- 북한, 사드 배치 움직임 비난...“참여한 대결국면” (03/19, 연합뉴스)
  - 북한은 19일 미국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빌미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비난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장문의 논설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움직임이 "러시아와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변두리에 각이한 급의 미사일방위체계를 구축해 유사시 사면팔방으로 미사일 공격을 들이대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함.
  - 아울러 통신은 미국이 '세계 지정학적 중심'으로 떠오른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주목하고 요충지인 한반도를 지배하고자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한미 합동군사연습도 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 미국, 북한미사일 식별 신형레이더 알래스카 설치 추진 (03/20, 연합뉴스)
  - 브라이언 매키언 국방부 수석부차관은 19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2016회계연도 미사일방어(MD)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식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알래스카주에 신형 장거리식별레이더(LRDR)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
  - 그는 미국 본토 방어의 핵심 체계인 '지상발사 중간단계 미사일방어 체계' (GMD)를 거론하며 "예산안에는 신형 레이더 개발 비용도 포함돼 있으며 이 레이더가 알래스카에 배치되면 북한 전역을 커버하면서 ICBM 식별 능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함.
  - 아울러 그는 올해 10월부터 시퀀스 트레이션(자동 예산 삭감)이 시행되면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MD 관련 예산이 더 줄어들게 돼 북한이나 이란으로부터의 잠재적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다. 중·북 관계

- 중국, 러시아서 북중정상 회동 가능성에 "정보 없다" (03/18, 연합뉴스)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북중 정상간 회동이 성사될지를 묻는 질문에 "발표할 만한 관련 정보가 없다"고 짧게 답변함.
  - 현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은 확실히 되나 북한 당국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참석을 확인한 적이 없어 그의 참석이 이뤄질지는 미정임.

- 중국 전문가, "리진진, 북중관계 개선·북핵 저지 임무" (03/20, 연합뉴스)
  - 양시위(楊希雨)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대사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외교적 직책"이라며 "리진진 대사는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핵개발 저지를 위한 노력을 한층 증가시켜 (북중) 관계를 개선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함.
  - 차이나데일리는 양 연구원의 이런 분석에 대해 리 대사가 중국의 몇 안되는 고위급 대사 중 한 명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이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신호를 발신했다고 해석함.
  
- 북·중·러 지방정부, 두만강 하구 생태계 보호 협력 (03/21, 연합뉴스)
  - 중국 지린(吉林)성 훈춘(琿春)시 가오위룡(高玉龍) 서기는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두만강 하구에서 국경을 맞댄 북한, 중국, 러시아 지방정부가 3국 접경 지역 생태계 보호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힘.
  - 중국 당국은 특히 3국 접경인 두만강 하구에 습지가 풍부해 기러기, 두루미, 백로 등 10여종의 국가 1·2급 보호조류가 다수 서식함에 따라 조류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아울러 중국은 훈춘시 광촨(防川) 일대를 중심으로, 인접한 북한 나선특별시 두만강동과 러시아 연해주 하산구가 각각 10km<sup>2</sup>의 토지를 합작구에 편입시켜 3국이 공동으로 관광·레저·오락시설을 건설·관리하는 '초국경 국제관광구역' 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라. 일·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마. 러·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바. 기타

- 특이사항 없음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암참 회장, "한미 FTA, 수치화하기 힘든 긍정적 성과 가져왔다"** (03/16, 연합뉴스)
  -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이하 암참) 김 제임스 암참 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3주년에 즈음해 FTA가 양국간 소통 등에서 수치로도 설명하기 힘든 긍정적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함.
  - 에이미 잭슨 암참 대표는 "한국이 아시아의 FTA 허브로, 향후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의 맥락에서 진정한 양자·다자 무역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 이행 과제가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함.
  - 아울러 그는 지적재산권, 금융, 자동차, 제약·의료기기 분야 등에서는 FTA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함.
- **미 해군, 한국 등 6개 '아시아 전략협력국' 지목** (03/16, 연합뉴스)
  - 16일(현지시간) 미 해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발표한 '21세기 해군력을 위한 협력전략' 보고서에서 "전략적 이해관계의 공유를 바탕으로 미국이 협력을 강화할 동맹국"으로 한국을 비롯해 호주와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을 꼽음.
  - 새 협력전략 보고서는 현재의 전 세계 안보환경에서 인도양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미 해군은 2020년까지 전체 해군 함정과 항공기 중 60%를 이 지역에 주둔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 또한 미 해군은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해군력 확장이 다른 주권국가를 상대로 영유권을 주장할 때 일종의 도전 수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군사적 의도에 대한 투명성 부족과 맞물려 긴장과 불안정 조성에 기여한다"고 지적함.

- "미국 본토 사드, C17 수송기 실어 수시간 내 한반도 배치" (03/16, 연합뉴스)
  - 미국 국방전문 매체인 '디펜스 업데이트' 는 16일(현지시간) 한국 군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육군이 한반도 비상상황 때 전개할 본토(Continental-US·CONUS) 기반의 사드를 배정해놓았다"고 보도함.
  - 이 매체는 현재 미국 텍사스의 포트 블리스 육군기지에 있는 사드는 C17 글로벌 마스터 수송기를 이용해 수 시간 내에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지만 한국은 중국과의 긴장을 우려해 사드 미사일의 영구적 배치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힘.
  - 또 이 매체는 이 같은 한국 정부의 모호한 태도와 사드의 일시적 배치 가능성은 한국 정부의 자체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와의 전면적 통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함.
  
- 러셀 차관보, "北 위협에서 한국 시민 보호할 시스템 고려" (03/16, 연합뉴스)
  -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7일 미국의 사드(THAAD) 문제와 관련, "한미 양국은 북한의 상당한 위협에 직면에 있으며 우리 군 당국은 한국과 한국 시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고려할 책임이 있다"고 말함.
  - 그는 사드 배치와 관련, "언제 어떻게 할지는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 "동맹 방어 차원에서 언제 어떤 조치를 할지를 한국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 아울러 그는 한미간 협의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어떤 언급이 있었느냐' 는 질문에는 "중국 동료의 어제 발언으로 그 이슈는 공공 영역에 있지만, 그것은 내 의제의 일부는 아니다"고 선을 그음.
  
- "한국 내 '사드 논란' 너무 커져...미국, 빨리 해명해야" (03/17, 연합뉴스)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엘렌 김 연구원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카네기재단에서 국제교류재단(이사장 유현석)과 미국 맨스필드재단(소장 프랭크 자누지)이 공동 주최한 '한미관계와 지역안보' 세미나에서 미국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를 조속히 해명하고 논란을 가라앉혀야 한다고 주장함.
  - 김 연구원은 "사드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가 자체적인 전략적 판단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 중국과 같은 외부국가가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러나 지금 한국 내에서는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너무 커지고 있다"고 밝힘.

- 김 연구원은 특히 "한국으로서는 미중의 경쟁구도 사이에서 어느 한 쪽을 결정해야 상황에 놓이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그럼에도 중국이 사드 논란을 이용해 박근혜 정부의 외교력과 한중 협력관계를 시험하려고 한다"고 주장함.
- 미 국무부 여행지도에 독도 '리앙쿠르암' 표기 복원 (03/17, 연합뉴스)
  - 1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홈페이지 확인 결과 미국 국무부가 독도의 미국식 표기인 '리앙쿠르암' (Liancourt Rocks)을 한국편 여행지도에 표기하지 않았다가 '일본 편향' 논란이 일자 곧바로 이를 복원시킨 것으로 드러남.
  - 이 여행지도는 지난해 10월31일 갱신된 것으로, 미 당국은 갱신 과정에서 기술적인 실수로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짐.
- 한미, 내달 국방 고위급회의서 '사드' 협의 착수할 듯 (03/18,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다음 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에서 주한미군에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우리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을 미측과 분담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짐.
  - 또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가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중국의 강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탐지거리가 2천km에 달하는 전방기지모드(Forward-based Mode) AN/TPY-2 레이더가 함께 배치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인 것으로 알려짐.
- 주한미군사령관, "北미사일 대비 다층방어망 구성 중요" (03/19, 연합뉴스)
  - 커티스 스키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18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과 미국이 '다층적이고 상호운용적인' 탄도미사일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또한 스키퍼로티 사령관은 "미국은 기존의 다층 방어망 시스템을 갖춘 반면에 한국은 한국형 미사일방어 시스템(KAMD)과 '킬체인' 구축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한미동맹 간 미사일 방어능력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미 하원 외교위원장, "위안부 역사기록 바로잡는 노력할 것" (03/20, 연합뉴스)
  -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새누리당 김한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 등 방미 중인 한국 국회의원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 논란과 관련, "(잘못된) 역사기록을 바로잡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함.
  - 아울러 로이스 위원장은 면담에서 공고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조속한 체결 필요성과 더불어 한국의 TPP 가입이 양국의 경제적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한미, 美합참의장 방한 앞두고 '사드' 또 엇박자 (03/22, 연합뉴스)
  - 미국 합동참모본부의 데이비드 스틸웰 아시아담당 부국장이 뎀프시 합참의장의 방한 때 사드가 논의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한국 합참은 이런 보도에 대해 입장자료를 내고 "미국 합참의장의 방한시 사드 배치에 관해 공식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한 바 없다"고 부인함.
  - 국방부의 핵심 관계자도 "이번 한미 합참의장 회담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는 공식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사전 협의과정도 없이 합참의장급 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국제관례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함.
  - 우리 정부도 미측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나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미측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공식 협의를 요청해올 때까지 '전략적 모호성' 을 유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짐.

## 나. 한·중 관계

- 中, '사드반대' 또 압박...한국 외교 시험대 올라 (03/16, 연합뉴스)
  -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드 문제와 관련한)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 해달라"면서 한미가 사드 문제에 대해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함.
  - 미중 양국이 아시아 지역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중국 내에는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의도가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짐.

- 그러나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이 사드 문제를 아시아에서 미중 간의 힘겨루기 차원에서 인식함으로써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입장을 정하고 이를 주변국에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음.

■ 中, "항일 전승 70주년 기념식에 차대통령 초청" (03/16, 연합뉴스)

-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방한 중인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와 면담 직후 기자들에게 "류 부장조리가 '박 대통령을 초청했다'고 하더라"고 전함.
- 나 위원장은 "류 부장조리의 언급에 대해 저도 박 대통령이 가시면 좋겠다고 동의했다"고 전했으며 이어 "한국과 중국, 미국이 지혜롭게 해결하면 좋겠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함.
- 이에 류 부장조리는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고, 6자회담 재개 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나 위원장은 말함.

■ 국방부, "주변국, 우리 국방정책 영향력 행사 안돼" (03/17, 연합뉴스)

-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 입장은 가질 수 있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견제에 입장을 밝힘.
- 그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관련 문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책과 대응책 관점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만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해 미국 정부가 결정해서 협의를 요청해올 경우, 군사적 효용성, 국가안보 이익을 고려해서 우리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함.
- 아울러 그는 우리 정부의 사드 구매 의사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사드를 구매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현재는 L-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과 M-SAM(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수준에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할 계획만 갖고 있다"고 설명함.

- 왕이 中외교부장, "한국, AIB 진일보한 연구" (03/21, 연합뉴스)
  - 21일 오후 개최될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사이의 양자 회담에서 북한·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양국 관계, 지역·국제 이슈 등이 논의됨.
  - 왕 부장은 회담 후 외교부 청사를 나가면서 AIBB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떻게 말했느냐는 질문에 "이미 한국 정부가 진일보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히지 않았나"라고 답함.
  - 그는 역사 문제도 논의됐느냐는 질문에는 "주로 오후 3국 외교장관회의의 진행을 위한 준비를 이야기했다"면서 "이밖에 우리는 양국 관계 모든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 이야기했고 폭넓은 공통 인식에 다다랐다. 아주 잘 이야기했다"고 말함.
  
- 왕이 中외교부장, "사드 입장, 이미 여러차례 얘기" (03/21, 연합뉴스)
  -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차 방한 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 시작 전 사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말했다. 모두가 아는 것이며 공개된 것이다"라고 밝힘.
  - 그는 '사드의 어느 부분이 중국의 국가 이익을 침해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도 "우리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으며 이날 오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가진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사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
  - 앞서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면 반드시 다른 국가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지역의 평화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유관국가(한국, 미국)가 관련 결정을 신중하게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 다. 한·일 관계

- 한일, 7차 軍위안부 협의... "서로 입장만 반복하는 단계 넘어" (03/16 연합뉴스)
  - 외교부 당국자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의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6일 서울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7차 국장급

협약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 해나가자고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힘.

- 또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상호간 자기 입장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단계는 넘어섰다"면서 "의미있는 대화를 통해 계속 접점을 향해 (나아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함.
- 그러나 세부 논의 방향과 관련, "이 문제에 대한 인식차가 쉽게 해소될 수 있으면 진작 해결됐을 것"이라면서 "과거 사항들을 돌이켜보면서 창조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한일 양국 국장의 책무"라고 전해 한일 양국이 구체적인 진전으로 나아가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됨.

■ 백악관 NSC보좌관, 아베 외교책사에 '한일관계 개선' 주문 (03/18 연합뉴스)

- 미국 외교안보 사령탑인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아베 총리의 '외교 책사' 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동북아 지역의 두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강력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미국의 이 같은 한일관계 개선 주문은 양국관계 악화가 북한 위협에 대처하고 중국의 부상에 맞서 역내 질서를 유지하려는 동북아 전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 두 사람은 특히 미일 상호 방위지침 개정 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있는데 주목하고 "성공적 결과물을 도출해 양국 동맹이 21세기 안보도전 과제를 대응해나가는 데서 충분한 역량을 갖춰나가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 한일 관계 풀어줄 조선통신사 일본서 재현 (03/19 연합뉴스)

- 재일민단 아이치(愛知)현 오카자키(岡崎)시 지부는 오는 4월 5일 오카자키시에 서 도쿠가와이에야스 사후 400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에야스 행렬' 에 조선통신사대가 처음 참가한다고 밝힘.
- 오카자키 지부의 재일민단 관계자는 "이웃한 두 나라가 조선통신사라는 대규모 사절단을 통해 일본과 교류하며 다양한 이야기와 발자취를 남긴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유산"이라며 "이번 행렬 참여를 통해 조선통신사의 의미를 세계에 알리고 나아가 양국 우호관계 구축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전함.

- 정부, "아베, 美의회 연설시 과거사 성찰 보여야" (03/20 연합뉴스)
  - 우리 정부는 아베 총리의 미국 의회 합동 연설이 공식 발표되면 다양한 수준의 외교 채널을 가동해 한미일 3각 협력을 정상화하려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 등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에 대해 아베 내각도 계승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을 반대해온 시민단체 등의 활동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의 우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연설에서 과거사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 내 대체적 기류로 알려지고 있음.

##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마. 미·중 관계

- 미국 싱크탱크 소장, "미국도 AIIB 참여해야" (03/16, 연합뉴스)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프레드 버그스텐 명예소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 주도의 AIIB에 주요 동맹국들의 참가를 독려하고 나아가 참여해야 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주장함.
  - 그는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같이 개발에 차관을 지원할 새 기구는 필요 없으며 중국이 AIIB를 주도하면 국제적 규범을 어기고 자국의 정치·군사적 이해가 반영된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함.
  - 또한 그는 중국이 커지는 힘에 걸맞은 지도력을 보일 것과 국제적 목표와 개발 지원에 더 많은 자원을 지원하길 미국이 촉구했었다며 중국이 AIIB를 설립해 이 방향으로 나갈 때 이를 막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위선적이라고 비판함.

- 9월 미국 방문하는 시진핑 주석, "신형대국관계 논하고 싶다" (03/17,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6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드루 파우스트 하버드대 총장과 만나 최근 폐막한 양회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9월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각계 인사들과 '중미 신형대국관계'에 대해 토론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중국신문사(中國新聞社)가 보도함.
  - 중미 신형대국관계는 시 주석이 2013년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안한 개념으로, 충돌하지 말고, 상호이익을 존중하며, 공영하자는 뜻을 담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미국에 대해 중국의 '아시아 주도권'을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담겼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미국, 동맹 잇단 AIIB 참여에 곤혹...미·중 신경전 가열 (03/18, 연합뉴스)
  - 영국이 지난주 AIIB 참여를 공식으로 선언한 데 이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3개국도 17일(현지시간) AIIB의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할 계획을 밝히면서 미국이 곤혹한 입장에 빠짐.
  - 미중 양국이 AIIB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향후의 아시아 경제·무역 질서를 누가 만들 것인가를 둘러싸고 양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그 시험대가 바로 AIIB로 평가되기 때문임.
  - 미국 정부는 "AIIB 참여는 각국이 판단할 문제"라며 애써 태연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AIIB의 투명한 운영을 강조하는데 방점을 찍는 분위기로 동맹국들의 AIIB 가입을 막지 못하게 되자 이후의 운영상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는 것으로 해석됨.
  
- 시진핑-키신저 회동... "미·중, 글로벌 의제 설정해야" (03/18, 연합뉴스)
  -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17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미국 외교의 거두로 불리는 헨리 키신저(91) 전 국무장관을 만났다고 신화통신과 AFP 통신 등이 보도함.
  - 시 주석은 키신저와의 만남에서 "중국은 평화발전의 경로를 고수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제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세력이 될 것"이라며 "양국은 서로를 존중하고, 갈등을 줄이며, 공통분모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함.
  - 이에 키신저 전 장관은 자신의 사적 방문을 위해 시간을 내준 시 주석에게 감사를 표하고 "미·중 관계는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양국은 이제

글로벌 의제를 설정해나가야 할 위치에 놓여 있다"고 평가함.

- 미, 거액 횡령 中공기업 간부 기소…양국 '반부패 공조' (03/18, 연합뉴스)
  - 미국 법무부는 중국 공기업 식량비축관리총공사 전직 간부 차오젠쥬(喬建軍)과 그의 전 부인 자오스린을 불법 이민과 돈세탁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보도함.
  - 중국은 부정 취득한 돈을 갖고 해외로 달아나는 부패 공무원들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고, 미국도 그런 범죄인들에게 도피처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사건은 중국의 반부패 캠페인과 관련한 양국의 대표적 공조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함.

## 바. 미·일 관계

- 日, 미 국채 최대보유국 되나…中과 격차 5억달러로 좁혀 (03/17, 연합뉴스)
  - 미국 재무부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집계에 의하면 중국의 미 국채 보유는 지난 1월 전달보다 52억 달러 감소해 1조 2천391억 달러에 그친 반면, 일본은 77억 달러 증가한 1조 2천386억 달러로 중국을 바짝 추격함.
  - HSBC는 미 국채로 이동하는 일본 자금이 앞으로 2~3년 최대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으며, 블룸버그는 이 추세대로라면 일본이 조만간 중국을 제치고 미국 국채 1위 보유국이 될 것으로 내다봄.
- 美전쟁포로 모임, "전쟁범죄 사과 없으면 아베 의회연설 안돼" (03/18, 연합뉴스)
  - 미국 전쟁포로 출신 모임의 하나인 '바탄과 코레히도 전투 미국 수호자 기념 연합회'의 잰 톰슨 회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의 재향군인위원회에 보낸 서면증언을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과거 전쟁범죄를 사과하기 전에는 의회 연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톰슨 회장은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은 역사적 화해가 될 수 있으며 그 첫 걸음은 과거의 전쟁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도쿄 전범재판의 유죄판결을 거부하는 아베 총리의 과거 진술들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함.

- "일본 자위대, 미군에 탄약 제공 가능해진다" (03/18, 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 정부는 미일 군사 협력을 지구적 규모로 확대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자위대의 대(對) 미군 후방지원 확대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함.
  - 현재의 가이드라인은 자위대의 대 미군 지원 범위를 '일본 주변이면서 전장에서 떨어진 후방지역(비전투 지역)' 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새 가이드라인은 이 같은 지역적인 제한을 대폭 완화, 자위대가 전 세계에서 미군에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게 됨.
  - 더불어 자위대의 대미 지원 활동 내용 면에서 지금은 급수·급유, 부상자에 대한 의료 제공 등에 그쳤지만 새 가이드라인은 비전투 지역에 한해 미군에 탄약을 제공하거나 발진 중인 미군 전투기 등 항공기에 급유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전망이다.
  
- 아베 총리 부부, 미셸 여사 '용승한' 대접 (03/19, 연합뉴스)
  - 미국의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 여사가 전 세계 빈곤층 소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렛 걸스 런' (Let Girls Learn) 운동을 홍보하기 위해 18일 오후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처음 방문함.
  - 일본은 미셸 여사를 극진하게 대접함으로써 올해 가장 중요한 외교 이벤트로 꼽히는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일 밀월' 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아베 총리의 방미에 앞서 원활한 양국관계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아베 총리는 19일 오후 일본 방문 이틀째인 미셸 여사와 총리 관저에서 만난 자리에서 미셸이 주도하는 개도국 소녀 교육 지원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일본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로 3년간 420억 엔(약 3천 889억 원) 이상을 부담할 방침이라고 알려짐.
  
- 미 의회, 아베 총리 상·하원 합동연설 허용 기탁 (03/19, 연합뉴스)
  -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18일(현지시간) "현재 의회 지도부의 기류를 볼 때 베이너 의장이 아베 총리의 상·하원 합동연설을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함.
  - 미국 정치·외교 관련 정보지인 '넬슨 리포트' 도 의회의 정통한 고위소식통을 인용해 "베이너 의장이 아베 총리의 상·하원 합동연설을 위해 공식 초청장을 보내는데 동의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와 논의 절차 등으로

공식 발표는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힘.

- 아베 총리의 합동연설에 대한 미국 의회 내부의 반대 기류에도 불구하고 TPP문제와 가이드라인 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의 도움이 필요한 미국이 실익을 위한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됨.

## 사. 미·러 관계

- 마러, 미 우주인 우주정거장 운송 계약 연장키로 (03/17, 연합뉴스)
  - 타스 통신은 17일(현지시간) 러시아 연방우주청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올해 하반기에 러시아 우주선을 이용해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미국 우주인들을 운송하는 계약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전함.
  - 미국은 지난 2011년 자체 우주왕복선이 모두 퇴역하면서 ISS로 우주인을 보내는 운송 임무를 러시아 소유스 우주선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은 2017년까지인 계약을 1년 연장하여 2018년에는 러시아 소유스 우주선을 이용해 6명의 자국 우주인을 ISS로 보낼 예정임.

## 아. 중·일 관계

- 한중일 정상회담 성사 '아베 담화' 가 관건될 듯 (03/16 연합뉴스)
  - 한중일이 21일 서울에서 열린 제7차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 에 합의했지만, 성사 여부는 결국 '아베 담화' 내용에 달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 이날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와는 별도로 열린 중일 양자회의에서 중국은 역사문제를 강하게 거론하며 3국 정상회담의 '조건' 을 부각한 반면, 일본은 '조속한 개최' 에 방점을 찍어 양국간 인식차를 보여줌.
  - 이에 3년 만에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은 해빙을 연출했지만 3국 정상회담 개최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까지 합의하지 못하고 역사인식에서 여전히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등 성과는 한정적이었다고 분석됨.

- 중국 '아베담화' 본 뒤 한중일 정상회담 판단할 듯 (03/17, 연합뉴스)
  - 중국은 올해 8월15일을 즈음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발표할 전후(戰後) 70년 담화(일명 아베 담화) 내용을 지켜 본 후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 판단하겠다는 의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함.
  - 동시에 중국은 아베 담화가 '1998년의 공동선언을 포함, 양국 간에 작성된 4개의 기본 문서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는 입장을 복수의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전함.
  - 이에 따라 올해 한국이 의장국인 한중일 정상회담과 그것을 계기로 열릴 양자 정상회담은 여름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고 교도는 전망함.
  
- 중국, "센카쿠 표기 지도는 일본의 침략 입증" (03/18, 연합뉴스)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1960년대 말 중국 정부가 제작한 지도에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의 일본 식 표기가 담긴 것과 관련, "일본의 침략을 증명하는 증거"라며 역공을 펴.
  - 홍 대변인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국제법에 따라 댜오위다오는 중국으로 귀속됐다"면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관련 지도의 표기는 댜오위다오가 중국에 속해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한 지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함.
  
- 중일, 4년 만의 안보대화서도 '침예한 신경전' (03/20, 연합뉴스)
  -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갈등 심화, 역사인식 문제 등의 영향으로 한동안 중단됐다가 4년여 만에 재개된 중일 안보대화 결과를 두고 양국은 다른 인식을 보여줌.
  - 일본 교도통신은 양국이 우발적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해상 연락 메커니즘'을 조기에 운용하기 위한 작업을 가속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이 일본의 각종 군사적 행보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함.
  - 중국외교부 역시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보' 에서 "중국은 근년 들어 일본이 군사안전영역에서 취하는 일련의 동향에 우려를 표명하고 일본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대중(對中) 인식을 수립하는 한편 '전수방위' 를 견지할 것을 희망했다"고 밝힘.
  
- 일본 재무상, "조건 맞으면 AIB 참여 검토" (03/20, 연합뉴스)
  -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재무상은 20일 각료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대출

제공에 대한 믿을만한 메커니즘 확보 등 조건이 맞으면 AIB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함.

- 아소 재무상은 "부채의 지속가능성 문제 등에 대해서도 (중국 측에) 계속 요구를 해왔다"며 "만약 이런 문제들이 보장된다면 참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아직까진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임.
- 로이터 통신은 AIB가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경제대국의 패권 다툼 문제로 부상하는 마당에 일본이 미국의 반대에도 이런 언급을 내놓은 것 자체가 놀랄만한 일이라고 분석함.

■ **아베 총리, "일본의 AIB 참가, 신중한 검토 필요" (03/20,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AIB에 일본이 참가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함으로써 같은 날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의 발언에서 한 발짝 물러섬.
- 그러나 일본 정부 안에서도 중국과의 외교·경제 관계를 감안해 참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어떤 식으로 입장이 최종 정리될지 주목됨.

■ **왕이 中외교부장, 日겨냥 '역사직시 미래개척' 강조 (03/21, 연합뉴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최근 몇 년간 3국간 양자 관계가, 특히 중일관계, 한일 관계가 역사인식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3국 협력도 이로 인해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강조함.
- 그는 이어 "올해는 반(反)파시스트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로 70년이나 됐는데 중한일 3국에 있어 역사 문제는 여전히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면서 "이 문제를 미래형으로 만들면 안 되며 '역사직시 미래개척' 이라는 8개 한자로 정리할 수 있다"고 강조함.
- 왕 부장이 역사 문제를 계속 강조한 것은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적 태도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며, 중국은 중일 정상회담은 물론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이유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문제에도 여전히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분석됨.

## 자. 중·러 관계

- 중국-러시아, 시베리아철도 이용한 물류협력 강화 (03/19, 연합뉴스)
  - 중국 철도 당국은 18일 러시아와 접경한 중국 동북의 내이멍구(內蒙古)자치구 만저우리(滿洲里)역에서 철도로 국경을 넘어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진입하는 중-러 과일·채소 운반 전용열차 운행을 시작했다고 중앙인민라디오방송(CNR)이 19일 보도함.
  - 만저우리역 관계자는 "국가의 일대일로 발전 전략을 관철하기 위해 러시아와 동유럽으로 향하는 철도 루트를 적극 개척하고 있다"면서 "러시아 철도 당국 및 화주들과 협상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중-러 과일·채소 운반 전용열차를 운행하게 됐다"고 전함.
  - 전문가들은 중-러 철도를 이용한 과일·채소 운반이 도로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데다 해운에 비해 운송시간이 3분의 1로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중국 철도 당국은 과일·채소 운반 정기열차 운행도시를 노보시비르스크 이외에 모스크바, 이르쿠츠크 등지로 확대할 방침임.
  
- 러시아, 동부지역-중동북부 가스관 사업 연기 가능성 (03/19, 연합뉴스)
  - 러시아의 새 가스전 두 곳과 중국 동북지역을 연결하는 대규모 가스관 설치 사업이 설치비용이 보다 적게 들어가는 '알타이 노선' (서부노선) 완공 뒤로 미뤄질 수 있다고 정통한 소식통들이 18일(현지시간) 밝힘.
  - 한편 지난주 알렉산더 노바크 러시아 에너지장관은 이 사업을 맡은 러시아 국영 가스업체 가스프롬이 오는 2019년 첫 가스 수송 실현을 위해 애쓰고 있다며 이미 수송로를 다 개척했고 5개 러시아 파이프생산업체들이 대구경 파이프 소요량의 3분의 1 생산계약도 체결했다고 주장함.
  - 그러나 세계적으로 가스 가격이 하락하고 중국 공급가가 원유 가격에 연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투자비 마련이 여의치 않은 실정임.
  
- 푸틴 대통령, 중국의 '항일 전승기념 열병식' 참석 결정 (03/21, 연합뉴스)
  - 21일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9월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되는 제2차 세계대전 및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결정했으며 중국 외교부는 푸틴 대통령의 방중을 환영한

다는 입장을 표명함.

- 중국은 이번 열병식에 2차대전의 주요 참전국과 아시아 및 다른 지역 국가 지도자, 유엔 등 국제기구 책임자,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를 위해 이바지한 국제적 우호 인사 등을 초청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오는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주최하는 제2차 세계대전 승리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푸틴 대통령의 방중에는 일종의 '답례' 성격도 담긴 것으로 해석됨.

#### 차.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국제전략연구센터 제공

### Ⅲ. 북한 인권 동향

####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한, 장애인 유럽공연 선전…“인권소동 물거품”(연합뉴스, 3.16)
  -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공세에 맞서 장애 청소년들의 유럽 공연 선전에 적극 나섰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장애 청소년 공연단의 최근 유럽 공연 소식을 전하며 "출연자들이 고마운 사회주의 조국의 장애인 보호정책 속에 예술적 재능을 꽃피우는 모습을 펼쳐보였다"고 주장했다.
  - 공연단은 지난달 20일 영국 옥스퍼드대를 시작으로 이달 2일까지 영국과 프랑스에서 공연을 펼쳤는데, 신문은 공연단이 '바다의 노래', '평양날과람', '아리랑', '부채춤' 등 무대를 선보였다고 "시력, 청각, 지체 장애인들이 전문 예술인 못지 않게 손뚱금과 가야금을 타고 춤을 추며 노래하는 모습이 관중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고 전했다.
  - 이어 "이번 공연은 적대 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 소동을 순식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놓은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관객이 북한의 높은 장애인 교육 수준을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 신문은 현지 친북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조선 장애자들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리고 있다"면서 "관람자 모두가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 대해 얼마나 황당한 허위선전을 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 북 내륙지방 물 부족에 농민들 근심(자유아시아방송, 3.18)
  - 북한 평안북도와 자강도를 비롯한 내륙지방이 여전히 물 부족과 전기부족의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평안북도 국경지방의 한 농촌 관계자는 "신의주시와 동림군, 용천군 주택지구에는 아직 보름동안 전깃불이 한 번도 깜박거리지 않았다"며 "내륙지방에 눈이 아주 적게 와서 앞으로 농사가 큰 걱정이다"고 밝혔다.
  - 양강도와 함경북도의 일부 산간지방에 폭설이 내려 주민 피해가 속출했다고 알려졌다지만, 신의주와 용천 지방에는 최고 20cm 정도의 눈이 한번 왔을 뿐 적설량이 적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임.

- 지난해에 지독한 가뭄피해를 당한 내륙지방에서는 물 부족을 미리 간파하고, 지난해 말부터 "흐르는 물을 모조리 잡자"는 구호를 내걸고 우물파기와 '졸장박기' 공사를 벌였음.
  - 하지만, 해마다 줄어드는 수자원 때문에 북한 농민들은 울상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음.
  - 북한당국도 해마다 수자원이 줄어드는 원인이 산림 황폐화에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최근 발표한 노작에서 산림 황폐화의 심각성을 시인하며 "나무를 마구 베는 것은 역적 행위와 같다"고 엄단을 지시했음.
- "북 집결소장 탈북자 돕다 처형"(자유아시아방송, 3.18)
-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기였던 2011년 인민군 보위사령부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구실로 끌려갔던 함경북도 집결소(강제송환 탈북자 수감소) 소장 김철산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비공개로 처형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다음.
  - 보위사령부에서 처형된 김철산은 군복무 후 청진시 안전부(보안부) 격술교관을 거쳐 순찰대조장, 기동대 대장이라는 자리를 두루 거쳐 2001년에 상좌의 계급으로 함경북도 집결소 소장에 임명됐었다고 함.
  - 함경북도 집결소는 청진시 송평구역 농포(은정)동에 위치해 있으며 법질서 위반자들을 주로 수용했지만 2천년대 초부터는 북한을 탈출해 한국행을 기도하다 중국공안에 체포돼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을 전문으로 수용하는 시설로 탈바꿈을 하였다고 그는 언급했음.
  - 김철산이 취임한 뒤 함경북도 집결소는 다른 집결소들에 비해 그나마 강제 송환된 수감자들의 편의(인권)를 생각해주는 시설로 인식돼왔다고 그는 평가했음.
  - 그러나 김철산은 2010년 도보안국 산하 냉동창고 소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직장이 바뀐지 1년 되는 시점에 보위사령부가 조사할 것이 있다며 그를 소환해 간 후 지금껏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함.
  - 그의 가족들도 여전히 청진시에서 살고 있어 김철산이 처형됐으리라고 누구도 생각지 못했으나 올해 초 가족들의 신원조회 과정에서 처형된 것으로 확인돼 도보안국 동료 간부들도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함.
  - 소식통들은 "김철산은 수감자들의 편의도 봐주었지만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왔다"며 "일각에서는 집결소 소장까지 했으니 죽어 마땅하다는 비난도 있지만 주변에선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 외화난 북한, 영세 주민들에 '외화콩' 강제 징수, 소식통 "北당국, 각 세대에 빨간콩 5kg 바칠 것 강요"(데일리NK, 3.18)
  - 북한 당국이 '충성의 외화벌이' 명목으로 빨간콩을 바치라고 강제하고 있어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음.
  - 함경북도 소식통은 "전국의 농촌에서 '외화콩' 으로 불리는 빨간 콩 수집사업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면서 "군당(郡黨) 위원회가 직접 포치(지시)한 '충성의 외화벌이' 과제로 모든 가정들은 5kg의 빨간콩을 무조건 바쳐야 한다"고 전했다.
  - 소식통은 "요즘 시장에서 빨간콩 1kg에 5,000원 정도 하는데 5kg을 사려면 2만5천원이 든다"면서 "돈 있는 사람들이야 큰돈이 아니지만 농사와 장사로 근근이 먹고 사는 일반 주민들에겐 큰 돈"이라고 지적했다.
  
- 북한군 탈영병, 중국 단둥에서 체포(자유아시아방송, 3.21)
  -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 황금평에서 중국 단둥으로 탈북한 북한군 무장 탈영병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17일 새벽, 무장한 북한군 2명이 중국 단둥으로 탈북 했으며, 이 중 한 명은 지난 19일 현지 공안에 검거됐고 나머지 한 명은 현재 도주 중임.
  - 검거된 북한군은 당시 식당 여주인을 인질로 붙잡고 중국 군경과 대치하다 제압 됐으며 도주한 군인 한 명은 다른 도시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커 단둥 기차역과 터미널 등에서 차량과 인원에 대한 검문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북한 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점점 늘어나는 탈영병에 골치를 앓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탈영병들을 부대로 신속히 복귀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음.
  - 또 홍콩에 본부를 둔 시민단체 '중국인권민운정보센터' 는 지난해 12월 말 중국 지린성에서 북한군 탈영병이 조선족 4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뒤 중국 인민해방군 2천 명이 북·중 국경 지역에 추가로 배치됐다고 주장한 바 있음.

## 2. 북한 인권

- 북한 재외 근로자 인권 실태 새 이슈로 부각(연합뉴스, 3.16)
  -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던 외국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의 인권실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음.
  - 북한 인권단체인 NK워치는 16일(현지시간)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가 끝난 다음 비정부기구(NGO) 발언을 통해 북한이 외화 때문에 러시아에 약 2천 명을 파견하는 등 외국에 노동자를 보내 거의 노예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음.
  - 이에 대해 다루스만 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마지막 인사말을 통해 "여러 NGO의 지적에 감사한다"면서 "북한이 외국에 내보낸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유엔 메커니즘 안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 김명철 NK워치 대표는 "북한 재외 근로자 인권 실태의 심각성을 알리려고 북한의 재외 근로자 출신 탈북자 13명을 인터뷰해 작성한 청원서를 유엔 현대판 노예제도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제출했다"면서 "북한당국이 재외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 비자금을 조성하는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음.
  
- 중국 "국제사회, 북한인권문제 공정하게 다뤄야"(연합뉴스, 3.17)
  - 중국정부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북한당국의 반인도주의 문제 등을 강하게 거론한 데 대해 "국제사회가 조선(북한) 인권 상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다루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중국은 평등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인권 갈등을 처리할 것을 한결 같이 주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음.
  - 또 "중국은 조선이 경제사회를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을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건설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홍 대변인은 '유엔은 중국에서 생활하는 탈북자들이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증을 희망한다고 말했는데,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관련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음.

-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지속적 관심" 촉구(미국의소리, 3.18)
  -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
  - 영국은 17일 열린 토론회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를 통해 조성된 북한인권에 대한 고조된 관심과 문제 해결의 전기가 계속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것임.
  - 영국은 또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곧 서울에 문을 여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음.
  - 슬로바키아 역시 북한인권 상황은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모든 인권 침해에 대해 적절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음.
  - 네덜란드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와 함께 북한이 유엔 인권기구들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유엔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음.
  - 덴마크는 북한 당국에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음.
  - 반면 북한은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의 인권 문제를 거론했음.
  - 미국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구실 아래 인종차별과 소수민족 탄압, 불법도청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임.
  
- 일-EU,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유엔인권이사회 제출(미국의소리, 3.20)
  - 일본과 유럽연합이 19일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음.
  - 5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음.
  - 특히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와 반인도 범죄의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책임을 묻는 일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음.
  - 이어 지난해 유엔총회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음.
  - 또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정식 의제로 채택하고 공개회의를 열어 북한인권 상황

- 을 논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안보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현장사무소가 충분한 자원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마루스키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에 의한 국제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회 등 지속적인 행동을 촉구한 것을 환영하면서, 오는 9월 열리는 30차 인권이사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음.

### 3. 탈북자

- 고려대 "탈북자 年100명씩 직업 교육"(조선닷컴, 3.16)
  - 고려대는 올해부터 탈북자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돕는 '탈북자 직업 교육'을 본격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 고려대 염재호 총장은 지난 12일 인터뷰에서 "탈북자들이 직장을 잘 구하지 못해 이 땅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올해부터 탈북자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 염 총장은 연간 100명씩 내년까지 200명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 탈북 청년들의 '성공 모델'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음.
  - 고려대 교수들이 직접 커리큘럼을 짜고 탈북자들을 가르칠 예정이라고 하며, 염 총장은 "대학이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사회적) 신뢰가 쌓인다"며 "탈북자 교육은 이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했음.
  - 현재 정부의 탈북 청년 교육 지원 정책은 주로 대학 특례 입학과 장학금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학을 졸업해도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탈북자는 드문 실정임.

### 4. 이산가족

- 미 의원, 국무부에 이산가족상봉 서한(자유아시아방송, 3.19)

- 미국 의회의 마크 커크 연방 상원의원과 찰스 랭글 하원의원이 지난 18일 국무부에 한인이산가족들과 북한의 가족 간 상봉을 우선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음.
- 존 케리 국무장관을 수신자로 작성된 편지를 보면, 올해가 한국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라며 국무부 대북정책의 우선 순위에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들의 상봉 문제를 뒤야 한다고 촉구했음.
-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중요시하면서 지난해 2월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는 등 이산가족을 다시 만나기 위한 협의를 남북대화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미국에 사는 10만의 한인 이산가족들은 남북이산가족상봉에 소외되면서 가족 재회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미국의 상원과 하원 의원이 국무부 장관에 보낸 서한이 미북 대화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상봉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대화 재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랭글 의원 대변인은 밝혔음.
- 이와 관련해 미국 내 한인 비영리단체인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의 이차희 사무총장은 연방 상원과 하원의원이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국무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 서한으로 이산가족 상봉의 기대감이 커졌다고 말했음.

## 5. 납북자

- 6·25전쟁 납북자 175명 추가...총 3천805명(연합뉴스, 3.18)
  -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6·25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열고 175명을 6·25전쟁 납북자로 추가로 결정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음.
  - 이로써 2010년 12월 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3천805명이 6·25전쟁 납북자로 공식 인정됐음.
  - 이번에 추가 인정된 납북자에는 납북 당시 제2대 국회의원이던 백상규 씨, 대전지법 초대 천안지원장을 맡고 있던 정봉모 씨 등이 포함됐음.
  - 이 총리는 "국가의 책무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상처를 다 치유했다고 할 수 없다"며 "북한은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의

남북대화 제의에 호응하고 납북자 생사 확인 및 송환 문제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보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 유엔 北인권보고관 "北의 외국인 납치 문제 해결해야"(연합뉴스, 3.20)
  - 마루스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반인도 주의적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력을 유지하고 구체적 성과를 볼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를 집중 조명할 것을 촉구했음.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날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지난 1950년부터 어린이를 포함해 2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북한으로 납치된 것으로 추정할 바 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음.
  -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를 위해 국제납치·실종 관련 총체적 규모 측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인권이사회·총회 등 유엔 메커니즘의 지속적 활동,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콘택 그룹)들의 단합된 노력, 관련 국제회의 개최, 시민사회의 적극적 역할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 아울러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곧 서울에 개설되는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가 이런 전략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고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아울러 "북한 정부는 조만간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을 포함해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인권이사회 회의는 북한 인권상황에 변화를 촉진하고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기회이며, 어느 때보다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북한 측은 "북한에 대한 유엔 결의안이나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이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 정책을 가진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미국과 함께 인권문제를 정치화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 7. 대북지원

- 유엔 식량농업기구, 올 대북 예산 427만 달러 책정(미국의소리, 3.18)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는 올해 미화 427만 달러의 예산으로 8건의 대북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식량농업기구는 최근 발표한 '북한 식량 수요공급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3건의 농업개발 사업과 5건의 기술협력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농업개발 사업은 북한 주민들에게 보존농법을 전수하고 이모작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럽연합과 스웨덴이 조성한 식량안보협력기금 (Food Security coordination) 225만 달러로 운영됨.
  - 보존농법 (Conservation agriculture)은 비료 대신 논밭에 작물 그루터기를 남겨 분해시키고, 토양의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미생물 충을 파괴하지 않도록 쟁기질을 피하는 친환경 농법임.
  - 이를 통해 토양 구조를 강화해 비료를 덜 투입하고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기술협력 사업은 목초 종자 증식 (pasture seed multiplication)과 쌀 증산, 수확 후 손실 감축 사업, 구제역과 조류독감 예방과 퇴치 사업 등이 포함되며, 미화 202만 달러가 사용될 예정임.
  - 한편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CERF는 올해 상반기 대북 사업을 위해 배정한 200만 달러 가운데 30만 달러를 식량농업기구에 지원했음.
- 미 구호단체, 북한에 수도시설 지원...최근 설비 보내(미국의소리, 3.20)
  -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이 최근 북한 내 병원 두 곳에 수도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보냈음.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관계자는 약 3주 전, 황해남북도 내 병원 두 곳에 수도시설 설치에 필요한 장비를 보냈다고 말했다.

- 지원품에는 태양열 패널과 물 저장탱크, 수도 파이프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하며,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수도시설을 설치할지는 북한 당국자들과 최종 합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북한의 수도관리국과 또 다른 미국의 구호단체 웰스프링 (Wellspring)과 협력해 우물을 판 뒤 수도 탱크와 태양열 패널, 중력을 이용한 수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음.
- 이 단체는 지금까지 북한 내 약 9곳에 수도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일상생활과 건강에 필요한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지원품이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추가 지원을 협의하기 위해 이달 중순 북한을 방문하려 했지만 북한 측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 3월 중순 방북을 위해 비자를 신청했지만 북한 측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5월까지 방북 계획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는 설명임.

## 8. 북한동향

- 특이사항 없음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